

“90년대생”의 건투를 빌며...

교수칼럼

김종수
한국어학 교수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KBS 2TV에서 방영된 <회사 가기 싫어>라는 드라마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웠다. “조밀 착 리얼 오피스 드라마”라는 부제처럼 현대 직장인들의 일상사를 가감 없이 그렸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전개되는 이야기 중간에 외국인의 시선으로 해당 사건을 논평하면서 현대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를 꼬집는 방식도 신선했다. 무엇보다 2014년 최대 인기작인 <미생>이 고졸 계약직 사원의 성공기로 다수의 청년들에게 대리 만족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회사 가기 싫어>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90년대생”의 일상적 면모를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말그대로 ‘리얼’한 드라마였다.

드라마와 현실에서 주목받는 “90년대생”

이 드라마 속 90년대생 사원은 점심 시간이 업무 외 시간이므로 사무실의 동료 직원과 같이 식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정시 퇴근을 엄수하여 업무와 사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길 원한다. 기존 조직 사회의 관행과 위계를



세대 갈등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투쟁이다.

(사진=중앙일보DB)

고려하지 않는 당돌한 직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90년대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연말에 출간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올해 초부터 세간에서 인기를 끌었다. 급기야 윌버튼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며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면서 90년대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90년대생”은 대학교에서 대개 09학년부터 18학번에 해당하는 현재 2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2007년에 유행했던 “88만원 세대”에 속하기도 하면서 “Z세대”에도 걸쳐 있다.

20대는 사회에 활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세대

“88만원 세대”라는 명명이 기성세대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청년 세대의 정치경제학적 상황을 담고 있다면, “Z세대”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고 대중문화 산물의 적극적 소비자인 청년 세대의 개성적이며 독립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최근에는 90년대생들이 “9급공무원 세대”

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랜 경제적 불황이 야기한 취업난의 여파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강한 선망의식에서 비롯된, 소박하지만 절박한 세대명이다.

20대 청년 세대는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중요한 세대이다. 헝가리 출신의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 주장하듯 젊은 세대의 부상과 기존 세대의 퇴진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원 교체를 통한 사회 변동은 필연적이다. 이때 전개되는 인구학적 신진대사의 순환, 즉 세대 교체 과정에는 세대 갈등이 항상 일어난다. 성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자식과 ‘살아보니 어른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더라’라는 부모의 갈등처럼 사회의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청년 세대와 기존 세대는 사사건건 부딪치게 마련이다. 세대 갈등은 당사자들 간에는 곤혹스럽고 난처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투쟁인 것이다.

냉혹한 사회를 이끌 90년대생의 건투를 빈다

사실 90년대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최근의 현상은 90년대생의 적극적인 세대 역할에 주목하기보다 그들의 사회적 효용론을 설파하고 있는 듯 보인다. 분위기 맞출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당돌한 90년대생’에 대한 ‘사용설명서’(‘90년생이 온다’의 저자는 대기업 인사관리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를 근거로 90년대생에 대한 경제적 효용성과 정치적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기존 세대의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90년대생은 사회가 요구하는 경제 활동 인구로서 정당한 지위에서 활약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내몰려 사회적 위축감 때문에 세대 갈등의 중심 주체로서 역할마저 포기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냉혹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90년대생의 건투를, 그나마 빌 따름이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②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이다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는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지 당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학교가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대학이 사립대학이라서 등록금이 비싸고 국공립대학이라 조금 저렴하다는 것만 알 뿐 양자의 제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학의 등록금 문제나 재단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대학을 공공기관처럼 여기다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국공립대학은 국가재산이고 사립대학은 사유재산이 아니냐고 대답한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모든 대학은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권을 행사하는 국공립대학이 공익기관임은 당연하다. 설립자와 그 계승자들에 의해 구성된 학교법인에 운영권이 있는 사립대학 역시 설립 목적에 공공성이 명시된 공익적 기관이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학교법인, 특히 대학 법인은 사립일지라도 다른 분야의 (재단) 법인들과 다르다. 운영 주체인 특정 단체나 설립자 개인의

재산보다 더 많은 설립 자금을 일반인들의 기부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다. 더욱이 대학이 설립된 이후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설립 주체들의 기금 출연은 거의 없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외하면 국가의 각종 지원이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는 대학의 확장을 위해 토지를 불하해 주고 (아주 싼값에 팔거나,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싼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해주고), 교육부는 각종 예산을 지원해주고, 기업들은 건물을 지어주고, 일반인들은 기부금을 낸다. 이처럼 대학의 법인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이 국가와 사회 공동체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사실상 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소유물이다. 한마디로 대학의 주인은 사회이고, 법인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이며, 대학교수들은 법인의 피고용자들이다.

그런데 대학의 이러한 공공성이 운영 주체인 법인과 피고용인인 대학교수(전임 교수)들 양자로부터 침탈당하고 있다. 교수들은 늘 신임 교수의 임용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학과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사회적 현실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

로 결정하고, 대학의 수장인 총장을 자신들의 의사대로 선출하려 한다. 대학교수들은 대학에 재산을 투자한 주인들이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피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이 대학의 주인인 양 행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역사적인 연원을 가진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특권의 한 연원은 유교 사회의 유산으로서 전근대사회 형성된 지식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에 있다. 조선 시대 이래 한국 사회는 유가 지식인들이 500년간 통치했다. 이때 형성된 지식인을 사회적 엘리트로 존중하는 문화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지식인은 청빈하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염려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존재들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교수들은 유가적 지식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지식인이다.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강사료로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들은 높은 연봉 덕분에 자식들을 해외에 유학 보내고, 자신도 방학이 되면 술하게 해외여행을 가서 행복한 모습을 SNS에 자랑하는 이기적인 유한계급일 뿐이다.

교수들 특권의 또 다른 연원은 근대사

회 사상의 자유연장선에서 오는 학문적 자유 이념이다. 대학교수들은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대학 총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러한 말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학문 연구에서뿐 아니라 사회 비판 활동에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금 교수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손으로 총장을 뽑겠다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교수들은 대학에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도 않고 대학으로부터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학 운영에 관한 시대착오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도록 하거나 동료 시간강사들의 생계를 돕도록 해야 한다. 기금 마련 등으로 자신들이 받은 혜택의 일부라도 대학사회에 되돌려 주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